

주요 정책의 쟁점

(1997. 8. 17~9. 25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긍 의견	보완 의견
8.19	금융개혁 법률 제정 및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 감독 책임지는 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와 특수 법인 금융감독원 설치 한국은행내 금융통화위 설치,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금융감독권 분리를 통해 시중은행의 독립성, 즉 경영 자율성 제고 금융 경쟁력 강화의 기초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감독원의 정부 기관화보다는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필요 시중은행의 완전한 경영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
8.25	1997년 세법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채 상환, 합병, 업종 전환 유도 세금 감면 차입금 이자 손비 인정 단계적 축소, 접대비 제한, 기밀비 단계적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재무 구조 개선과 구조 조정 촉진 부패방지라운드 대비 및 고비용 경영 구조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조 조정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대책 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
9.1	부도유예 협약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권 포기 각서 등 채권 확보 서류 사전 제출 '중소 협력업체 자금부담지원 제도'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권 관련 분쟁 예방으로 기업 회생에 도움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 협력업체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협약 적용 대상 기업 확대 필요
9.7	통계 행정 선진화 계획	부문별 통계 세분화, 신규 통계 개발 등 통계체계 개편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 동향 분석 및 예측 능력 제고 다양한 통계 수요에 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계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과거 통계치 보정 필요
9.9	외국인 연수취업제	외국 인력에 일정 기간 국내 연수 후, 국내 근로자와 동등 조건 취업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장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수생 신분 보장 필요 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
9.9	경부고속철도 수정 계획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구간 2005년 완공 총 사업비 17조 9,913억 원 설계 검증·감리는 불·독 업체에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각적 수정 계획안 마련으로 합리성 제고 품질 관리와 안정성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기 연장, 사업비 증액 등의 책임 소재 명료화 핵심 기술 분야 네트워크화로 효율 극대화
9.11	그린벨트 제도 개선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주민 기존 주택 90 평까지 증가축 허용 일부 지역 생필품 슈퍼마켓, 체육·문화·의료 시설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 원주민 생활 편의 향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투기, 무분별한 개발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완 대책 필요 환경훼손의 우려 존재
9.18	1998년 예산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8% 증액 75조 5,600억 원 규모로 편성 공무원 임금 인상을 3% 방위비 6.2%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수 부진에 대응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긴축 예산 편성 임금 등 경상 경비 축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율 인상, 채권 발행 등 정도에 어긋난 재원 마련 방안 양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혁 필요